

# 민형배 “목포역세권 대개발·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상업·문화·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 중심으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버스·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

목포역 일대 서남권 경제 핵심 거점

무안·영암·신안 하나의 도시로 연결

‘목포시 교통·도시 혁신 전략’ 발표

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

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

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영암·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 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와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면서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현 기자



사상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뽑는 6·3지방선거에 출마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토론회 대진표보니... A조 ‘치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조별 결선 TV토론회 대진표가 확정됐다.

후보검증 강화를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백지화한 공천물에 반발, 4선 중진 이계호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비경선은 당초 8파전에서 7파전으로 전환됐다. 조별로 각각 4자, 3자 대결이 치러질 예정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예비경선 조별 토론회 추첨 결과 A조는 강기정·김영록·민형배·주철현 후보로, B조는 신정훈·이병훈·정준호(가나다순) 후보로 대진표가 편성됐다.

A조는 17일 오후 5시10분부터 7시5분까지, B조는 18일 오후 5시10분부터 7시5분까지 각각 광주MBC 스튜디오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다.

민주당 경선후보 번호는 1번 김영록, 2번 강기정, 3번 정준호, 4번 주철현, 5번 신정훈, 6번 민형배, 7번 이병훈 후보로 정해졌다.

행정통합 선언 후 실시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A조는 양강과 중위권 간의 피말리는 경쟁이, B조는 중위권과 하위권 후보 간 차별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조 민형배·김영록·강기정·주철현 17일 격돌

B조 신정훈·정준호·이병훈 18일 ‘3자 대결’

권역별로는 A조는 광주와 전남이 2명씩, B조는 광주 2명에 전남 연고 후보 1명이 격돌하는 구도다.

정기 관계자는 “A조는 본경선과도 같은 화끈한 대결이 예상되고 B조에서는 거친 격론보다는 인물과 공약을 앞세워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전으로 흐름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선후보자 등록공고를 시작으로 한달간의 경선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후보자 등록은 11일 마감됐고 기탁금은 예비·본경선, 결선 합쳐 1인당 최대 1억1100만원이다.

안심번호선거인단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는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 9만개를 풀로 제공받은 뒤 총 3000개의 유효 응답 표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원 100% 예비경선에선 온라인투표, 당원 50%+여론 50%인 본경선과 결선에선 당원은 온라인과 인·아웃바운드를 혼용하고 안심번호선거인단은 아웃바운드(5회)로만 진행된다.

후보자 경력은 예비경선에선 1개, 본경선·결선에선 2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TV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합동연설회는 14일 중앙당사에서 열리고 토론회 후 본경선에서는 합동연설회 대신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진행된다.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열리고 권역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권역별 정책배심원은 30명으로 구성된다. 패널토론과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되 배심원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경선들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혁신안으로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배제하고 대신 도입한 정책배심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상당수 후보들은 “무늬만 배심원제로, 실질적 후보 검증의 기회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선 이 의원은 전남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광수 기자

광주 5·18·시민단체 “6월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해야”

## “개헌 무산되면 정치권 결단 부족·책임 회피”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5·18단체가 국회를 향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YMCA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즉각 개헌 절차에 착수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 속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적 과제다.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이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국민투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또한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여야 정당은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헌은)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



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이며, 국민 모두의 미래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개헌부터 추진하는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여야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최소 개헌 과제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결단 부족과 책임 회피의 문제

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을 미루자고 한 데에는 유감을 표하면서 “개헌 논의의 ‘선거운 정치’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태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권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내란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단체들은 “정치권이 이번에도 개헌을 미룬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광안문화관광재단 Gwang'an Cultural Foundation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 2026 26명암 왕인문화축제

##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